

김기문 “中企 업무량 늘면 월 100시간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중소기업중앙회장)

네번째 임기 시작하며 간담회 열어
윤 정부 2년차 ‘중소 정책과제’ 내놔
중소·소상공인 규제개혁 추진해 달라

“법이 통과되기까지 14년이 걸렸다. (대기업은)법을 만들었으니 지켜야 한다. 시행령을 잘못 만들면 효력이 떨어진다. 대기업들은 출신수범해서 중소기업과 상생을 해달라.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이 잘 된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이 더 잘된다.”

지난달 말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 임기 시작을 알리면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놓고 강조한 말이다.

2027년 2월말까지가 임기인 김 회장은 네 번째 회장직을 이어나가게 됐다. 김 회장은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 임기 동안의 노력을 믿어주시는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도 든다”면서 “이번 임기도 중소기업에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뛰겠다”고 언론에 간략한 취임 소감을 전했다.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김 회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노동개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책과제의 견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서도 정부가 올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1순위로 ‘주52시간제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마침 정부는 같은 날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유연화 방안을 놓고 “기업이 필요할때 추가 근로가 가능하도록 열어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만족하진 않는다. (정부

가 완화한 것만으로) 중소기업은 바쁠 때 일할 수 없다. 업무량이 폭증할 때 일 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불법파업과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노조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김 회장은 “화물연대 문제처럼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형태를 빌어서 불법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노조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윤석열 정부가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6대 분야, 15개 과제가 담긴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6대 분야에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가 두루 포함됐다.

김 회장은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역대 정권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의 70.6%는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9.4%는 ‘불만족’을 표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노동개혁 원칙 수립(57%)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44.2%) ▲규제개선 노력(30.2%) 순으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정부가 가장 중

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노동개혁’(60.4%)을 1순위로 꼽는데 이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41.4%) ▲뿌리기업 육성(21%) ▲기업승계 원활화(20.4%) ▲디지털 및 스마트 전환 촉진(12.8%) ▲공동사업 활성화 등 협업지원(11.8%)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담합’으로 규정돼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행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왔다.

김 회장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수단”이라며 “B2B 거래, 즉 기업 간 거래만큼은 담합의 골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47%)을 비롯해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금융비용 부담’(17.6%) 등을 주요 당면 과제로 꼽았다.

또 한국 경제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대·중소기업 양극화’(16.8%) 등이 올랐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통신비만 꼬박꼬박 내도 신용점수 오른다

통신 3사 합작법인 공정위 통과
통신정보 활용 신용평가 받을 전망

통신 3사 등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과 더존비즈온 등 3사의 기업신용조회업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승인했다. 두 분야 모두 과점 시장으로, 해당 분야 시장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SK·KT·LGU+) 등 5개사의 ‘전문(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건’과 더존비즈온 등 3개사의 ‘기업신용조회 회사설립 건’을 심사한 결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SKT 등 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보증보험 등 5개사는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설립 회사 지분은 통신 3사가 각 26%, 나머지 2개사가 11%를 보유한

다.

지금까지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NICE평가정보(70%), KCB(27%)가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금융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통신 3사는 통합된 통신정보를 합작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신용 평가시장에서 통신정보의 활용성과 시장가치를 증대시키고,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보다 개선된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노년층 등 금융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어 불리한 개인신용평가를 받는 계층도 통신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통신 3사가 경쟁사 등에 통신정보를 봉쇄할 우려 등을 검토했으나, 복수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주 독과점적 개인신용평가시장에 통신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사의 등장으로 신용정보업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더존비즈온 등의 기업신용조회업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더존비즈온인 보유한 ERP 기업정보가 기업신용조회업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크지 않고, 한국평가데이터(52%)와 NICE(47%)가 과점하는 시장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축산물 물가 ‘안정세’... 여전히 높은 수준

필요시 수입해 물가 하향세 유지키로

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농축산물 특성상 일부 품목은 작황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폭등했다. 정부는 비축물량 공

급과 필요시 수입을 통해 농축산물 물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해 추석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

비 0.3%, 전년동월대비 4.8% 각각 상승했다. 농축산물은 전월대비 0.7% 하락, 전년동월대비 0.02% 소폭 상승해 농축산물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다만 “3월 들어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점차 안정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견련,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건의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3년 중견기업계 세계 건의’ 제출

중견기업계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주요 7개국(G7)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을 위해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중견기업계 세계 건의’에서 글로벌 경기 위축, 최악의 수출 실적 등 경제의 ‘적신호’를 돌파하기 위해 법인세 추가 인하, 최저한세 적용 제외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은 물론 OECD 33개국의 단일 구간, 네덜란드·프랑스의 2개 구간과 달리 4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고 2018년에는 3000억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하

는 등 글로벌 조세 트렌드와 반대로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연말 국회의 격론을 거쳐 결정할 모든 구간 세율 1% 인하, 여전히 높은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0년의 역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또 연구개발(R&D) 및 통합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 중견기업 대상 최저한세 비과세·공제·감면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에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가정신과 경영노하우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현재의 상속세율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AI 기업진단 ‘비즈브레인’ 도입

경영성과, 내부역량 등 분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진단 시스템 ‘비즈브레인’을 도입한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AI진단은 기업데이터와 약 1000만건의 산업별 데이터를 AI가 자동 연동시켜 외부환경과 경영성과, 내부역량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사업을 연계해주는 시스템이다. 기존 비대면 진단에서 기업이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빅데이터 분석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또 PC 웹 기반 진단에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진단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고객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진단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기업맞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